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18년 2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체계적인 역량 평가에 따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지원한다

- 2018-2022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양코르 라이프 플랜) 발표 -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

○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2017년 43만 7000개에서 2022년 80만 개로 확대하고,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함.

①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해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 계획을 수립해 적합 일자리에 매칭.
-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 노인의 역량 강화.

② 인프라 강화

-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 지정, 60+ 일자리 DB ‘백세누리플러스’ 구축 등 참여자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매칭하는 기반(인프라) 구축.
- 우수 노인생산물 공동 브랜드화, 판로 확대, 상권 분석 서비스 제공 등 노인생산물 품질 관리 체계 구축.

③ 안정된 민간 일자리 확대

- 단순노무직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해 전략 직종 및 장기 채용기업 지원 강화.
- 숙련 기술직 은퇴자가 청년에게 기술·기능을 전수하는 세대 통합형 일자리 지원.
-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수 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노인 추가 채용 시 사회보험료 등 지원.

④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 전문직 은퇴자가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는 시니어사회공헌단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2. 9.)를 거쳐 '2018-2022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안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했다.

○ 제1차 종합계획(2013-2017)이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제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 특히 베이비부머 등 노인의 특성 및 욕구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고려했다.

■ 제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노인 일자리 80만 개 제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노인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상 정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 4개 분야(①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② 인프라 강화 ③ 안정된 민간 일자리 확대 ④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 그간 노인 일자리에서는 참여자의 역량이나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및 역량 강화 교육이 부족했다.

○ 앞으로는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 계획서에 기초해 적합한 일자리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역량 평가 결과를 기초로 일자리 연계·교육훈련을 담은 개인별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또한 기존의 단순 소양 중심의 노인 일자리 교육에서 벗어나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

과 협력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할 예정이다.

- 참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참여 노인과 일자리 수요처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작업장·일자리 수요처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참여 노인의 안전사고 보상 강화를 위해 실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2. 인프라 강화


- 개인별 역량에 맞는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 우선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굴된 정보를 현행 노인 일자리 포털인 백세누리 시스템에 등재해 산재한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 또한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을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해 개인별 활동 계획에 기반한 상담, 교육·취업 연계,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동안 없었던 노인생산품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간 노인 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 노인생산품의 낮은 인지도와 판로 제한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 노인생산품을 공동 브랜드화하고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까지 판로를 확대한다.
 -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설립 단계부터 지역 상권 분석 및 기술·인증, 디자인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안착을 지원한다.
- 노인 일자리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한정된 일자리 참여기관의 자격을 사회적경제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일자리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다수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한다.
 - 일선 현장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활동처 및 활동 프로그램 발굴,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전담인력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8년부터 고용 기간을 현행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3. 안정된 민간 일자리 확대

- 능력 있는 노인이 민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 그동안 단순·단기 직종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노인을 전락 직종에 채용하거나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 양질의 일자리에 노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을 우수 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해 사회보험료, 홍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숙련직 은퇴자의 기술·기능 전수도 지원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숙련 기술직 은퇴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세대 통합형 일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 노인 일자리 사업단 지원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4.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치매공공후견인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일자리를 추진한다.
 - 공익활동은 지역 특성에 맞거나 지역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 수당을 차등지원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해 노인 일자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인다.
- 복지부는 앞으로 ‘제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어르신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 “이번 계획이 노인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비전	보람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일자리 80만 개 제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 노인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기여하는 노인상 정립
	
정책 과제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무역량지표 개발 ② 개인별 활동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③ 맞춤형 교육훈련 인프라 확대 ④ 참여자의 인권 및 안전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60+ 일자리 DB(가칭 '백세누리플러스') 구축 ②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 지정 ③ 노인생산물 공동 브랜드화 및 판로 확대 ④ 상권 분석 및 성장 지원 서비스 제공 ⑤ 전달체계 다변화 및 투명성 강화 ⑥ 전담인력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⑦ 법적 근거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안정된 민간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략 직종 중심으로 시니어인턴십 개편 ② 세대 통합형 일자리 지원 ③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④ 시장형 사업단 자립 촉진 ⑤ 기업의 고용 창출형 사회공헌 지원 활성화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니어 사회공헌단(시니어 프로보노) 도입 ② 지역특화사업 및 지역기여사업 육성 ③ 재능 나눔 및 노인자원봉사 효율화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4236,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018. 2. 9.

II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세부 내용을 담은 고시 공포,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공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의 전문적인 수련 과정(2급 1년, 1급 3년)을 거친 후 취득 가능.

○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 그간 전문가로서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에 보수교육 실시 내용이나 절차, 시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는 것이다.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과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2018. 2. 13.)

■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 법령(2시간), 정신질환자 등의 의료·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으로 운영된다.

○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한편,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공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진경 과장은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 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424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 2018. 2. 13.

III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 생활 보장한다

-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주요 내용>

지난 10년간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함.

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국회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폭 확대 추진.

②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
- 가족 상담 지원·돌봄교육 강화 등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③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 내 장기요양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기관·인력 수급 계획 수립 및 시행.
-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
- 부채비율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기관 평가 체계 개선,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개선.
- ‘요양지도사’ 자격 도입 등을 통해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시장 진입 유도.

④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운영위원회 신설 및 재정 위험에 대비한 수시 점검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 정책 결정의 전문성 향상.
- 부정 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등 부정 수급 관리 강화.
-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 비율 준수 관리 강화로 회계 투명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2. 13.)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전문가 등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구성(2017. 4.),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논의(2017. 6., 2017. 11., 2018. 1. 총 3회 개최) 및 공청회(2017. 11) 등을 통해 계획(안) 수립.

○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2013-2017)은 수급자 및 적정 기반(인프라)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을 둬.

- 특히,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노인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 또한,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증가 및 과도한 경쟁 구조,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등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구체적으로, 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②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③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④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 분야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치매 등 상시적으로 요양 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수급 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한다.
- 신설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대상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기존 장기요양 인프라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 치매 단계로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지역 내 돌봄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건보공단 간 치매 환자 등록 정보, 치매 진단 정보 연계 등을 추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회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으로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완화한다.
 - 아울러 그동안 비급여로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수급자의 서비스 전 이용 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하여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한다.

- 신규·재가 수급자의 기능 상태, 욕구 조사에 따라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보험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수급자 욕구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 개별 수급자의 건강, 주거 생활 환경, 가구 특성 등 욕구 조사 → 케어플랜 작성 및 적정 급여 이용 안내 → 수급자 모니터링·사례 관리 → 케어플랜 재작성

○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방문형·입소형 재가서비스를 개선해 재가생활(aging in place) 지원을 강화한다.

○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상담·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 지원 상담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도 연구·개발하여 도입을 검토한다.

- 또한 현행 ‘가족요양비’*와 ‘가족인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요양기관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의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급여제도.

** (가족인요양보호사)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할 경우 방문요양기관에 고용 및 급여비용을 청구, 지급.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별로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기반)를 공급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한다.

- 이를 위해 지역 내 노인인구·수급자 수 등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아울러 공립 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립시설(치매전담형)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 또한 공립기관을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 시 (가칭)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와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의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급여 제공 이력을 고려하고, 부채허용기준(현재 건설 원가의 80%)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을 추진한다.

* 기존 요양기관의 지정 요건 준수 여부, 결격 사유, 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지정갱신 심사를 실시.

- 또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협의체를 구성하고, 평가 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 (인센티브) 2회 연속 평가 최우수기관은 1회에 한해 차기 정기 평가에서 제외 / (페널티) 2회 연속 평가 최하위기관은 지정 갱신 탈락 요건으로 활용.

- 치매전담기관을 확대하여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만성중증 수급자가 요양기관에서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수급자의 고도화된 요구에 대응할 장기요양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 개발 경로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 요양보호사·실습생의 서비스 제공 현장에 동행하여 돌봄기술을 지도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동기를 부여한다.

- 아울러 요양지도사 자격 취득 경로를 전문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의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직무교육 대상자 범위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모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로 대폭 확대하고, 시설장에게도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는 체계를 만든다.

○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17개 시·도별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1개 이상 설치를 추진한다.

*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해 고충 상담, 역량 강화, 건강관리, 취업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관.

- 또한, 종사자 인력 기준(현재 수급자 2.5명당 1명) 강화 검토, 적정 임금 지급 보장 등을 통해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4.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현재 18% 수준) 확대,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도입 등의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한다.
 -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에 별도의 재정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요양 정책 거버넌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적정 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이 진입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지나치게 복잡·다양한 가감산제도의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이 우수한 적정 규모의 시설을 육성하고, 급여비용 청구·지급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부정 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및 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고, RFID* 사용 확대 및 사후 부당 유형 개발 등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부정 수급 및 부당·착오 청구를 방지한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역(시작 및 종료 시점)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전송하는 시스템.

- 재무·회계규칙 안착*을 위한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실시, 종사자 인건비 지급 비율 준수 여부 실태조사 및 부정 사례 모니터링 강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

* 재무·회계규칙 시행 시기(20인 초과 시설: 2018. 5. 30., 20인 이하 시설: 2019. 5. 30.)

■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비전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		
			
정책 목표	세부 추진 과제	정책 목표	세부 추진 과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하는 장기 요양 보장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②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 ③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 하는 지역 사회 돌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②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③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 ④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체계 개선
안심 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 요양 서비스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 인프라 관리 및 공공 인프라 확충 ②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③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성 강화 ④ 장기요양 일자리 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 요양 지속 가능성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 ② 장기요양 수가체계 합리화 ③ 장기요양 부정 수급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4248,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2018. 2. 12.

IV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나서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 기초생활보장 적정 급여 TF(반장: 복지정책관) 총 4회 개최.
- ◇ 제2의 ‘어금니 아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 사례 방지.
 - 고급 자동차 차명 보유를 가려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정보’를 활용.
 - 금융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재산 정보 추가 확보.
- ◇ 의료급여기관 현지 조사 및 과다 의료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 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 부과 및 제3자의 신고포상금제도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일정 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 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 가구 전수 조사(2018. 1.~2.)
 - 723가구는 추가 소득 등이 확인되어 수급 중지 또는 급여 감액.
 - 그중 43가구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 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 급여 TF(반장: 복지정책관)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 제도 개선 과제들은 관련 부처, 금융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보장기관(시·군·구)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예) 해당 기간 입금 총액: 수급자의 예금 계좌에 조사 기간 중 입금된 금액을 합산한 수치로서, 조사 시점의 잔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수시 출금 후 차명 보유 행위가 의심될 수 있음.

■ 더불어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우선,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 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제3자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4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연간 입원일수 + 투약일수 + 투약 없는 외래진료일수를 모두 포함한 일수.

○ 허위·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 부당 이득 관리 항목을 확대한다.

○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해 심평원·지자체 협업을 토대로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집중 관리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3월 1일 시행)이다.

■ 한편,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확인 조사와 연계하여 지자체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 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2018. 1.~2.)를 실시했다.

○ 그 결과, 추가 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는 수급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되었다.

- 이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재산 미신고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 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 중지외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하였다.

- 조치 대상인 723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 수 대비 0.06%인데, 이는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적 자료 연계 등의 노력이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 준 것이다.

* 2018년 1월 기준 103만 2996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 수급 사례는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 수급자 부정 수급 사례

- 충북 충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가 좁고 오래되어 처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음. 아파트는 계속 빈 채로 있다가 몇 달 전에 지인에게 월세 15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어 급여 과다 지급분 환수가 결정됨.
- 서울시에 거주하는 B씨는 기초수급 신청 당시 구형의 2000CC 자동차(가액 170만 원)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 자격을 초과하였으나, 본인이 2개월 이내 처분하기로 소명함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재산을 반영하지 않고 보장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당초 소명과 달리 2개월이 초과한 이후에도 자동차를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액 환수가 결정됨.

■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의 획기적 축소 및 국민최저선 보장 등 제도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장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426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기초의료보장과·복지정보운영과, 2018. 2. 23.

V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생활 균형 방안 최우선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만나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 저출산 극복 관련 과제를 사회적 대화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의 논의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2017년 출산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2017년 출생아는 최초로 40만 명대에 미치지 못하고,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역대 최저치 1.08명(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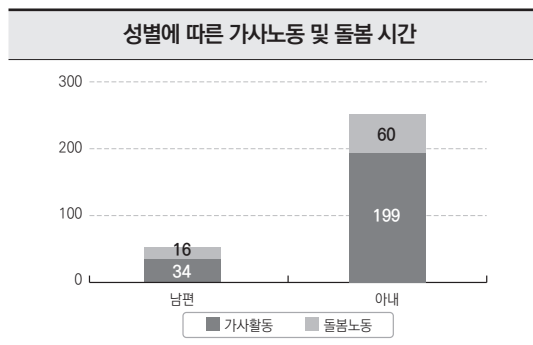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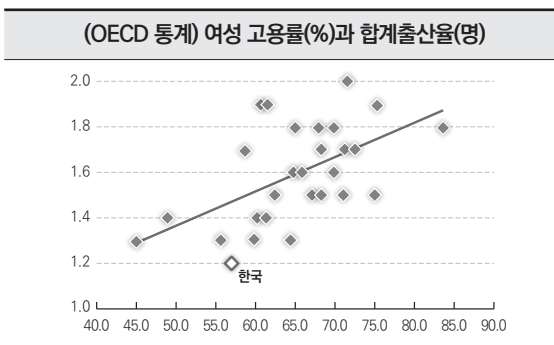
* 통계청, '2017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 발표 예정(엠바고 2018. 2. 28. 12시).

○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2개 국가 중 유일한 사례이다.

○ 여기에는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에서는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요 지표 변동 현황 및 추계〉



- 이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생활 균형 제도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라는 의견이 많다.
-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일·생활 균형)을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 중이며, 3월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제도의 문턱을 낮춰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앞으로 경제 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일·생활 균형 액션플랜 수립에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고, 향후 과제 실행 역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갈 것을 협의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427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기획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18. 2. 28.